

민주 “김건희씨 경력위조 의혹은 경력농단사태”

교육위원회 단독 소집 맹공

“윤석열 남에겐 대쪽, 본인엔 갈대”

국민의힘 “정치공작 시도”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경력 위조 의혹을 ‘경력농단사태’로 규정했다. 또 단독으로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나 김건희 씨의 경력농단사태나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의 수사 검사였고, 신 씨를 학력 위조와 업무방해 행위로 구속 실행까지 살게 했다”며 “그러나 그보다 더한 김 씨의 과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씨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라고 맹비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김 씨의 경력 부풀리기에 대한 윤 후보의 여섯 줄짜리 사과를 보면서 공정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짜 공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남에게는 대쪽인 윤 후보는 정작 본인 일에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라며 “앞으로도 바람은 계속 불 것이고, 갈대가 언제까지 대쪽인 척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대위 현안대응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김 씨의 뉴욕대 연수 경력과 관련, “5일짜리를 어떻게 연수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우리는 보통 견학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현근배 선대위 대변인은 TBS 라디오에서 “만약 공직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선거 벽보나 명함에 (뉴욕대 연수) 학력란에 썼다, 그러면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

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일부 대법원 판례 보면 경력을 속이고 취업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임금을 받게 되는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 사례는) 그간에 본인이 구사했던 논리에 의하면 딱 떨어지는 기소감”이라고 단정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 방역패스 문제, 수능 출제 오류 등을 명분 삼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공적 인물 검증과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에서 정식으로 전체 회의를 개의해 산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들어야 한

다”고 재차 요구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김씨의 교생 실습, 서울대 경영 전문 석사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갖고 허위 과장이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정당한 의문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며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을 꼬집어내며 “대학의 권위와 명예와 대학에서 강단에 서는 교원, 시스템 등 모든 걸 단 한번에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시도를 그만두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일정과 안전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겠다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무 말 대잔치, 가짜뉴스 정치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양도세 증과유예 이견에

민주당 특위 구성 논의

의총 앞두고…사실상 출구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유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한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자 내부 논의를 이유로 사실상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유예 정책과 관련,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의견을 좁히려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것이기에 그에 대해 자유롭게 못한 반면에 후보나 당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여지,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이걸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킹그룹’으로 불리는 이 특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유예를 비롯한 거세세 및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면서 원내 및 정책 라인 쪽과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위는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과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당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 이견 먼저 조장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유예는 이 후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제안한 정책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는 데다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 전에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것도 의총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1일 제1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획단장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을 임명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당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천 방향 설정과 정치신인·여성·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당하게 된다.

신정훈 기획단장은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기획단을 이룬 시일 내에 구성해, 준비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과 여성·청년 인재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尹선대위 내홍 폭발…이준석 “미련없다, 선대위직 모두 사퇴” 울산 회동 봉합 보름만에 또 파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21일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3일 ‘울산 회동’으로 당내 갈등상을 극적으로 봉합한 뒤 지난 6일 선대위가 가까스로 출범했지만, 다시 보름 만에 극심한 내홍으로 빠져 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미련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는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겸임해왔다.

이 대표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선대위 공보담당인 조수진 의원을 겨냥,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

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때다 싶어 속아 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윤 후보측 핵심 관계자)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나도 당 대표직은 유지된다. 그는 “당 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다”며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퇴 선언에도 ‘울산 회동’과 같은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선대위 인적 구성과 기능이 조정되고 윤 후보의 개인적인 설득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 대표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 등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당과 지지층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갈등을 봉합하려는 압박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수용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2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김 수석의 사퇴를 즉각 수용한 것은 이

번 사안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문 대통령도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작성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역시 전날 언론에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사퇴로 김 수석은 지난 3월 임명된 지 9개

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각종 논란으로 민정수석들이 조기에 사퇴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수석은 2년 2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후임인 김조원 전 수석은 2주만 보류 임명에 오르며 1년여 만에 교체됐다. 그 뒤를 이어 임명된 김종호 전 수석과 신현수 전 수석 역시 여권과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각각 4개월·2개월 동안만 자리를 지켰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민정 수석에 누가 기용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선임비서관인 이기현 민정비서관이 당분간 대행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1박 2일 호남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을 방문해 호남 공약에 나선다.

윤 후보는 22일 전북 완주에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방문한다. 이곳에 있는 완주수소충전소 및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후 광주 북구 인근에서 숙박한 뒤 오는 23일 광주 북구 AI 데이터센터 찾는다. 전남 지역 등 추가 세부 일정은 오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광주와 전남 목포를 방문한 지 38일 만이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